노숙자 명의 할부車 되팔아 '대포차' 사기 11억원 챙겨

광주 서부경찰은 6일 노숙자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입한 뒤 할부금을 갚지 않고 이를 되판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로 김모(44)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3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께부터 노숙자 안모(39)씨의 명의로 1천400여만원 상당의 라세티 차량을 구입한 뒤 캐피탈(제2금융권)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첫 달 할부금만 내고 대출금을 갚지 않는 식으로 차량 32대, 총 11억1천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3억원 대의 고가인 중장비가 일반 승용차보다 10배 이상의 금액을 대출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주로 중장비를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생활비가 필요한 노숙자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해주겠다"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의 명의를 빌렸으며, 출고 차량에 번호판을 바꿔 붙이는 일명 '대포차'로 1대당 1천만원 이상을 받고 되파는 등 추가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달아난 일당 이모씨 등 2명을 쫓고 있으며 명의를 빌려준 노숙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前 고려시멘트 법정관리인 항소 기각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혜광 부장판사)는 6일 법정관리 중인 회사의 자금을 담보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던 전 고려시멘트 법정관리인 오모(59·변호사)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KWS 임직원 최모(59)·안모(59)씨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믿고 선임한 법정관리인인 오씨가 편법으로 채권자들을 속여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은 일부 채권자들에게 손실을 끼치고 법정관리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 피고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탈법을 저지른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개인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점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은 인정돼 1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임직원인 최씨 등은 본연의 임무대로 법정관리 중인 회사의 탈법에 단호히 대처해야 함에도 오씨와 공모,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고려시멘트 법정관리인으로 있던 2001~2002년 구조조정 회사를 통해 회사정리채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계열사 자금 105억원을 은행담보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03년 5월 구속돼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2년 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최권일기자 cki@

광주·전남 대학 경쟁력 낮다

■ 2005년 대학교육협 지표 분석 결과

취업·진학률·교수 연구실적 등 전국 대학 평균에 크게 못미쳐

광주·전남 17개 국·사립 일반 대학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학생 취업률, 교수연구 실적 등 각종 지표가 전국 대학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표〉

본보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05년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대·광신대·광주대·광주여대·남부대·조선대·호남대·호남신학대 등 광주지역 8개 국·사립대학의 취업률은 49.6%로 전국 평균(64.35%, 이하 평균치)에 비해 크게 낮았다.

목포대·목포해양대·순천대·광주가톨릭대·대불대·동신대·명신대·목포가톨릭대·영산선학대 등 전남지역 9개 국·사립대학의 학생취업률도 58.75%로,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 광주와 전남의 취업률은 전국 16개 시·도 중 각각 15위와 13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처럼 취업 보장이 안 되면서 대학을 그만두는 학생도 많아, 광주와 전남지역 대학생의 중도탈락률이 각각 4.86%와 5.65%로 전국(4.27%)을 웃돌았다.

정부가 세계 수준의 분야별 연구중심 대학과 지역혁신을 선도할 지방 대학원 육성 등을 위해 오는 2012년까지 2조 300억원을 지원하는 2단계 BK(두뇌한국)21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은 많지 않았다.

광주와 전남지역 대학생의 대학원 진학률은 2005년 각각 8.2%와 5.89%로 전국(10.48%) 보다 낮았다.

지역 인재 역외 유출 방지와 타지역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한 장학제도 역시 부실했다. 교내 장학금을 받은 대학생 비율은 광주(62.37%)와 전남(68.45%)이 전국(55.62%) 보다 높았지만, 1인당 평균 장학금은 광주 84만3천원, 전남 66만8천원 등으로 전국(92만6천원)에 비해 적었다.

교외장학금을 받는 학생 비율은 광주(8.26%)는 전국(9.14%)에 비해 낮은 반면 전남(9.43%)은 높았다. 그러나 1인당 평균 교외장학금은 광주(141만3천원)와 전남(134만8천원)이 전국(163만6천원)보다 작았다.

전임교수의 박사학위 소지율은 광주(82.98%)와 전남(84.75%) 모두 전국(79.61%) 보다 높았지만 교수의 연구실적은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

교수 1인당 저서 수는 광주(0.11권)와 전남(0.15권) 모두 전국(0.19권)보다 적었다. 교수 1인당 학술논문 수는 광주(2.87건)는 전국(1.96건)에 비해 많았으나 전남(1.44건)은 부족했다. 특히 교수 1인당 국외 학술논문 수는 광주(0.26건)와 전남(0.15건) 모두 전국(0.39건)에 미치지 못했다.

학교 밖에서 연구비를 지원받는 교수 비율도 광주(47.54%)와 전남(57.84%)이 전국(61.98%)에 비해 낮았다.

전임교수 1인당 대학생 수는 광주(23.13명)가 전국(24.69명)보다 적어 학생에 대한 교수지도 여건이 좋았지만 전남(26.15명)은 나빴다.

학교시설 등도 열악해, 학교 도서관에 소장돼 있는 책을 학생 수로 나눈 학생 1인당 장서 수도 광주 55.07권, 전남 53.98권으로 전국 평균 58.8권에 모자랐고,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도 광주 2만3천원, 전남 1만3천원으로 전국 평균 3만4천원에 미치지 못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광주·전남 평가 대상 대학

광주	광신대, 광주대, 광주여대, 남부대,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호남신학대
전남	광주가톨릭대, 대불대, 동신대, 명신대, 목포대, 목포가톨릭대, 목포해양대, 순천대, 영산선학대

■2005 광주·전남 17개 대학 주요 경쟁력 지표

구 분	광주	전남	전국
취업률	49.6%	58.75%	64.35%
학생중도탈락률	4.86%	5.65%	4.27%
학생대학원진학률	8.2%	5.89%	10.48%
교수1인당 저서수	0.11권	0.15권	0.19권
교수1인당 학술논문수	2.87건	1.44건	1.96건
교수1인당 국외학술논문수	0.26건	0.15건	0.39건
전임교수1인당 대학생수	23.13명	26.15명	24.69명
학생1인당 도서구입비	2만3천원	1만3천원	3만4천원
학생1인당 장서수	55.07권	53.98권	58.8권

〈자료: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교육위원 입후보 설명회 '제 5대 광주시 교육위원 선거-입후보안내설명회'가 6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4층 대회의실에서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오는 31일 치러지는 교육위원선거에서는 교육청의 예산심사 등을 담당하는 7명의 교육위원이 선출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PC방 업주 도박혐의 구속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인 PC방을 차려놓고 도박성 게임을 설치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도박 개설)로 업주 장모(38·광주시 서구 풍암동)씨 등 4명을 구속하고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보훈청 직원이 돈받고 유공자 재심

전남경찰, 3명 검거

국가유공자 선정을 담당하는 보훈청 직원들이 상이등급 획득에 실패한 국가유공자들에게 부정 신체검사를 미끼로 금품을 받다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국가유공자 신청자들에게 재심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이모(40·광주보훈청 6급)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40·광주보훈청 6급)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씨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국가유공자 손모(3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3년 9월께 국가유공자 신체검사에서 '기준미달'로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손씨에게 부정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 대가로 현금 2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1천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기준미달 판정을 받아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손씨의 신체검사 서류를 파기한 뒤 신씨가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두 번째 신체검사에서 연금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상이등급 7급을 받았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상이등급 7급 이상을 받게 될 경우 최저 30여만원의 연금이 매월 지급되지만 '기준미달' 판정을 받으면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상이등급 신청자들이 신체검사에서 기준미달로 2차례 탈락할 경우 향후 2년간 신체검사를 다시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와 관련된 국가유공자 3명 모두가 새로운 신체검사에서 7급을 받은 것과 관련, 병원 측과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상나팔 가상의 재미교포 유언 조작 36억 사기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36억원을 사기친 일당이 덜미.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고 이필현박사, 고 이영기회장 등 2명의 재미동포가 '담양에 실버타운을 세워달라'며 스위스 은행에 맡겨둔 2조3천억원을 가져오는데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속여 이모(55)씨 등 4명에게 36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정모(62·광주시 남구 백운동)씨 등 3명을 구속.

○…경찰은 "피해자 이씨의 경우, '법인을 설립해 자회사를 주겠다'는 말만 믿고 5억원의 빚을 내서 모두 18억원을 정씨에게 넘겼다"고 전언.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